
 금융위원회	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font-size: 2em; font-weight: bold;">보 도 자 료</div>				 금융감독원
	<b>보도</b>	<b>배포 후 즉시</b>	<b>배포</b>	2019.4.16(화)	

<b>책 임 자</b>	금융위 자산운용과장 강 영 수(02-2100-2660)	<b>담 당 자</b>	김 영 민 사무관 (02-2100-2668)
	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 이 경 식(02-3145-6700)		황 선 오 팀 장 (02-3145-6710) 김 재 형 팀 장 (02-3145-6730)
	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장 오 세 정(02-2003-9800)		천 성 대 부 장 (02-2003-9810)

## 제 목 :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

- 2019년 4월 16일(화), 「**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**」 이 국무회의를 통과
- ①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를 위해 로보어드바이저의 **펀드재산 직접 운용을 허용**
- ② **유사투자자문업 감독을 강화**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이 개정  
 ('18.12.31. 공포, '19.7.1. 시행)됨에 따라 **법률에서 위임한 사항** 규정
- \* ① 위반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불수리가 가능한 금융관련법령 범위 구체화  
 ② 폐업 등 미보고, 자료제출 요구 불응시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 등
- **유사투자자문업자는 2020년 6월 30일까지 유사투자자문업 교육을 이수하는 등 개정 법령 시행에 대비할 필요**

### 1. 개 요

□ 2019년 4월 16일(화), 국무회의에서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안이 통과되었음

\*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('18.12.31. 공포, '19.7.1. 시행)에 따른 하위 법령 정비와 '4차 규제혁파 현장대화(총리실 주관, '18.11.21)'에 따른 후속조치

### 2. 주요 내용

#### ①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운용 허용 (시행령 §2, §87)

- **(현행)** 펀드재산은 자연인인 투자운용인력에 의한 운용만 허용되고, 로보어드바이저에 의한 직접 운용은 제한되고 있는 상황

\*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① 투자자의 투자성향 등에 부합하여 운용, ② 침해사고 방지 체계 구비 등의 요건을 갖춘 로보어드바이저에 의한 직접 운용 허용('17.5.8)

○ **(개선) 일정요건\***을 갖춘 경우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재산 운용 허용

\* ① 펀드의 투자목적 등에 부합하여 운용, ② 침해사고 방지 체계 구비 등

※ 그 외 4차 규제혁파 현장대화(총리실 주관, '18.11.21)시 발표내용별 진행 현황

-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자기자본 요건(40억원) 폐지  
→ 완료('19.3.20 금융투자업규정 개정)
-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에 펀드·일임재산 운용 위탁 허용  
→ 진행중(동 시행령 개정 후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예정)
-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개인참여 허용  
→ 코스콤에서 관련 인프라 구축중('19년 상반기 완료 예정)

②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불수리 관련 금융관련법령 구체화 (시행령 §102)

○ **(법률 개정사항)** 유사투자자문업자(법인인 경우 임원 포함)가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불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, 해당 금융관련법령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위임

○ **(시행령 개정안)** 금융투자업자 인가·등록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른 금융관련법령\*으로 규정

\* 유사수신행위법, 은행법, 자본시장법, 대부업법, 금융실명법 등 49개 법령

③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 (시행령 별표 22)

○ **(법률 개정사항)**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유사투자자문업 폐지시 등\*에 미보고하거나 자료제출요구에 불응시 과태료(3천만원 이하)를 부과

\* 유사투자자문업 폐지, 명칭·소재지·대표자 변경

○ **(시행령 개정안)**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과태료 부과사유에 대해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

- 유사 사례\*를 감안하여 법인인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우 1,800만원, 법인이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우 900만원으로 규정

\* 자본시장법상 유사사례

- 금감원 자료제출 요구 불응시(법 §419⑤ 등): 법인 1,800만원, 개인 900만원
- 금융투자업자가 상호, 본점위치 변경, 금융투자업 폐지 등 미보고시(법 §418): 1,800만원

※ 개정 자본시장법에서 금융위원회 고시로 위임한 유사투자자문업자 교육의 구체적 내용의 경우 관련 규정 개정 완료(금융투자업규정 개정, '19.3.20일)

### 3. 유사투자자문업 영위 관련

□ 개정 법령 시행일('19.7.1)부터 유사투자자문업 관리·감독이 강화됨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숙지할 필요

※ '18년 기준 총 2,032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영업중(법인: 590개(29%), 개인: 1,442개(71%))

#### <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 중인 자 >

- ① '20.6.30일까지 유사투자자문업교육 이수 필요 → 미이수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직권말소 가능
    - 금융투자협회에서 '19.7.1일부터 교육을 개설할 예정이며, 교육에 대한 세부사항은 금융투자협회(T. 02-2003-9881)에 문의
  - ②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유효기간(5년)이 도입되며, 기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우 교육 이수일로부터 5년간의 유효기간 설정
    - 유효기간 만료 후 재신고 하지 않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경우 미신고 영업행위로 처벌\*받을 수 있음
- \*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
- ③ 금융관련법령 위반 등 발생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직권말소 가능
  - ④ 보고의무 위반 및 자료제출 요구 불응시 과태료가 부과되며, 3회 연속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직권 말소 가능

#### < 앞으로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자 >

- ①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일 전 1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투자자문업 교육 이수 필요
- ② 신고 불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, 금융관련법령 위반자 등의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불수리 될 수 있음
- ③ 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 후에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자동으로 말소되며, 유사투자자문업 영위를 위해서는 재신고 필요

#### 4. 향후 일정

- ☐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법률 위임사항 등은 개정 법률 시행일 (‘19.7.1.)에 맞추어 시행하고,
-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운용 허용의 경우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출처표시	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<a href="http://www.fsc.go.kr">http://www.fsc.go.kr</a>	<b>금융위원회 대변인</b> prfsc@korea.kr	 넓게 들겠습니다 바르게 알려겠습니다	-+
--	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--

**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**

-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신고를 불수리 할 수 있는 근거규정 및 편법적 영업행위 발생 시 신고사항 직권말소 규정 등 신설

① 영업신고 불수리 근거규정 신설

- (현 행) 영업신고에 대한 불수리 규정 부재 → 신고 거부 불가
- (개 정) 영업신고를 불수리 할 수 있는 사유\* 신설 → 신고 거부 가능

\*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위반, 자진폐업·직권말소 후 일정기간(자진 폐업: 1년, 직권말소: 5년) 미경과, 건전영업교육 미수료자 등

② 신고사항 직권말소 규정 신설

- (현 행) 불법행위 등 발생 시에도 신고 말소 불가
- (개 정) 금융관련 법령 위반, 폐업, 보고·자료제출 의무 미이행 등 발생 시 신고사항 직권 말소 가능

③ 신고 유효기간 도입 : 5년, 5년 경과 후 유사투자자문업을 새롭게 신고할 필요

④ 미신고 영업 행위 등 제재 강화

	현 행	개 정
미신고 영업 행위	과태료 (3천만원 이하)	형사벌 (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)
보고·자료제출 의무 미이행	제재없음	과태료 (3천만원 이하)

※ 영업신고 불수리 또는 신고사항 직권말소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영업시 미신고 영업행위로 처벌